



1 박영수 이사장(가운데)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앞뒤

지난 1995년에 설립돼 25년간 국내 최고의 안전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온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12월 10일 기관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꿔 새롭게 출발한다.

정부의 건설 현장 안전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하게 된 공단의 지난 25년은 우리나라 안전문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4년 10월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공단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 당시 시설물은 건설이 우선이고, 완공된 이후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는 영성했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시설물이 건설 못지않게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일깨운 계기였다.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공단은 이 법에 근거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6개월 후인 1995년 4월 출범했다.

공단은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해 ▲ 시설 안전 ▲ 건설 안전 ▲ 지하 안전 ▲ 내진 안전 ▲ 시설성능관리 등 크게 5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출범해 업무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온 결과다.

이 중 '지하 안전'은 지하 공간 활용이 늘어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업무다. 공단은 지하 안전 분야와 관련해 지하 안전영향성 평가검토 및 현지조사, 중앙지하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경주와 포항지진을 계기로 중요성이 높아진 내진 안전은 국가내진센터를 설립·운영한다. 국가내진센터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의 내진 정책 및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지진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공단이 오는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 현장 안전강화 정책과 맥이 닿아 있다.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 만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건설업 사망 만인율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5~10배에 달하며,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추락사고 방지대책, 건설안전 혁신 방안, 건설 현장 화재 안전대책 등을 마련했다.

정부는 건설 안전 강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안전관



2 박영수 이사장



3, 4 한국시설안전공단 단원이 현장 업무를 하고 있다.

리원을 설립한다. 기존 건설·시설 안전 분야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온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모태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해 건설 안전 업무를 확대했다. 또 건설공사 감리를 통해 건설관리 업무에 축적된 경험을 보유한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을 편입하기로 했다.

이는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정책의 집행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6월에 공포된 '국토안전관리원법'은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공단의 역할을 건설 현장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로 확대하고, 공단 명칭을 국토

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이 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 과정의 안전관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준비단을 확대 개편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우리의 안전문화를 한 단계 더 선진화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



4